



베네수엘라
지진
2면

극우의 재기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확전 위험 키우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4면

노동자 투쟁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5면
현대차 노동자 투쟁 10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8~9면

민주당 내
갈등
12면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6~7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외친다

“
최저임금으로
당신들이
한번
살아보라
”

관련 기사 11면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제국주의적 갈취와 봉쇄, 사회 붕괴가 재난을 키우다

베네수엘라인들이 공포와 비탄에 빠졌다. 6월 24일 두 차례 연쇄 지진으로 [이 기사가 작성된 6월 27일 현재] 최소 1,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져 최소 3,000명이 다쳤다. 약 5만 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가족들과 친지들은 잔해 속에서 실종자들을 찾기를 애타게 받고 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피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열대의 더위 속에서 공원 같은 곳에서 노숙해야 했다.

지진 피해는 수도 카라카스 북쪽의, 베네수엘라 주요 공항이 있는 라과이라주에서 가장 컸다.

의사들은 라과이라주 병원 세 곳 중 두 곳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남은 한 곳으로 환자가 몰려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하다고 한다. 수도가 끊기고 정전과 통신 장애도 겪고 있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구조 활동에 동참했다. 구조대원의 약 70퍼센트가 자원자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구조대원들은 햇불이나 삼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들을 구하려 애쓰고 있다. 맨 손으로 땅을 파 이웃을 구하려 한 사람도 있다.

두 차례의 지진이 1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벌어졌다. 각각 진도가 7.2~7.5에 이르는 강진이었지만,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일본 해안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발생해 도쿄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지만, 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다.

인재(人災)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이토록 참혹한 것은 미국 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유린하고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임기 동안 사회가 붕괴한 결과다.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덮치기 전에도 기본 서비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톨릭계 구호 단체 '카리타스'에서 활동하는 하네트 마르케스 씨는 이렇게 전했다. "지진이 보건 체계를 무



미국은 이 재난을 이용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너뜨린 게 아닙니다. 보건 체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부부를 납치했다. 그 과정에서 83명이 죽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간섭은 베네수엘라인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각인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베네수엘라 침공 당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안전하고 적절하고 합당하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하겠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우리는 미국의 힘을 강렬하게 재각인시킬 것이다. 미래는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교역·영토·자원을 지키는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제거해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도 미국은 제재 때문에 자금과 구호 물자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되기 매우 어려워졌다.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제공하는 자금과 구호 물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CERP) 국제정책국장 알렉스 메인은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의 제재는 이전에도 지진 구호 활동을 제약하고 어렵게 만든 바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무 제약 없이 지진 구호 물자를 수령·배분하고 인도적 지원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미국 등이 부과하는 제재는 지진 대응 전반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

미국은 올해 초 델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제재를 일부 거둬들였다. 로드리게스가 전임자보다 더 가까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6월 25일 목요일 저녁 미국 재무부는 제재를 더 완화해, 지진 구호 물자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이중적일 것이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

이미 쿠바 보건 노동자들이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도착해 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료 지원을 제공해 온 오랜 우방이지만, 그 자신도 미국의 봉쇄 때문에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겪는 문제의 근원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에 붕괴된 건물의 다수가 1970년대

에 지어졌다. 베네수엘라에는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가 있지만, 그 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기반 시설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왔다.

"볼리바르식 사회주의"도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200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국제 좌파의 등대였다. 반신자유주의 저항 물결에 힘입어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3년 차베스 사망한 이후 대통령이 된 마두로는 차베스로 표현된 염원을 저버렸다. 차베스를 지지하며 행진했던 노동자·빈민의 대중운동은 마두로 하에서 동원 해제됐다.

마두로는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갈수록 탄압에 기댔다. SNS 규제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이 또한 지진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6월 25일 목요일 유엔의 긴급 촉구 이후 SNS 규제는 해제된 듯하다.

몇몇 보도들은 베네수엘라의 부패가 전기·물 공급과 병원 설비를 악화시켰다고 시사한다.

보건 문제는 '볼리바르식' 프로젝트의 비극적 결말과 연관성이 있다. 차베스가 시행한 복지 정책 '미시온'의 하나인 바리오 아텐트로 정책은 정규적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바리오 아텐트로 2010년대 중반에 붕괴했다. 보건소에서 일하던 쿠바 의료 노동자들이 만연한 부패에 항의하며 귀국했다.

베네수엘라 국가는 베네수엘라인들을 저버렸다.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은 가족들을 살릴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될 구급차도 의료진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 인재(人災)를 키운 제국주의적 갈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이 혼란을 이용해 패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미국 우익들에 맞서는 것이다.

커밀라 로일

선관위 불신과 정치 환멸 틈탄 극우의 재기 기존 체제 방어가 아니라 대중 운동이 해법이다

극우가 선관위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이용해 재기하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진행 중인 탓이다.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 사퇴 압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장동혁은 사퇴는커녕 도리어 반대파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

사실 차기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극우 성향이다. 김기현·나경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다. 국힘의 중심이 중도 우파가 아니라 극우임을 보여 준다.

올림픽공원 시위도 4주째 이어지며 극우의 투쟁 거점이 됐다. 또 다른 극우 청년 단체인 'BOSS'는 서울 홍대 일대에서 '재선거' 집회와 행진을 벌인다.

극우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틈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다. "선관위 사태는 진영을 떠나서 함께 분노해야 되는 일이다."

극우는 선관위의 무능·무책임을 부정선거론의 유기적 고리로 엮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모양새다. 선관위의 부실·부패 사례가 한두 가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시스템 불신

또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를 목격한 대중 속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문제 없어?' 하는 불신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리되면 선출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도 순응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실제로 올림픽공원 시위대는 경찰을 '중국 공안'이나 '가짜 경찰'로 몰아 조롱하며 사적인 검문·검색까지 벌인다. 경찰은 극우의 이런 무도한 행위를 자주 수수방관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극우가 과감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핵심 수단이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투표·개표·기입 과정의 오류 배후에는 중국·북한·민주당·언론·선관위 등으로 연결된 '거악'(윤석열이 "중북 반국가



선관위 무능·무책임으로 그동안의 극우 선관위 공격이 세를 얻고 있다

세력'이라고 부른)이 있다 → 이들이 국가기관을 점령해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 따라서 실력 행사를 통해 '거악'을 처단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부정선거론은 선거 불복을 주장하는 것이다. 극우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복 시도를 합리화하고자 부정선거론을 동원한다.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라는 구호는 이제 극우의 주요 슬로건이 됐다.

극우는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여야 공동 국정조사특위,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재명의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제안 등 국가기관의 해결책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한다. 극우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

극우의 핵심부는 선관위라는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새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기각하지는 않으나, 이는 더 큰 전략적 목표로 증속되는 전술일 뿐이다.

현재 올림픽공원 집회는 이러한 극우 선동의 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노총 등이 중국공산당 및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유포된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이곳이 극우로 진입하는 관문이 됐다. 올림픽공원 시위는 '부정선거, 재선

거'라는 즉각적인 요구를 넘어 극우의 공통 정체성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게다가 여권의 당권 투쟁은 극우에게 절호의 기회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들에게는 선명성 경쟁과 차기 당권 장악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극우는 절대 안 된다'라던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는 '그놈이 그놈이네'라며 여권에 환멸을 느끼고 냉소한다.

아직은 대중 정서가 고르지 않고 불균등해서 전반적인 환멸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대중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한 환멸이 깊어지면 '극우면 어쩌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역학이 극우가 반사이익을 얻는 토양이 된다.

좌파

따라서 좌파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대중을 안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손슬 진보당 의원은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문에서 부정선거나 재선거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극우가 청년들의 공론장에 진입하기 어려

움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한겨레TV 6월 26일 자, '올공 시위 궁금증 해부!! 청년층에 퍼지는 극우 음모론?!')

손 의원이 거론한 이 시국선언문은 실제로 부정선거나 재선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극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기하지 않은 채, 선관위 개혁만을 촉구한 중도적 입장이었다. 캠퍼스 극우는 이 시국선언문의 불철저함과 허점을 파고들어 공작하기도 했다.

분명 청년 전체가 극우화하고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큰 오류다. 그러나 선관위 규탄 시위에 대거 참가한 20~30대 중 상당수가 보수·우파 정체성을 지녔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반면 진보 성향 청년들은 극우 참가자들의 위협 행위 탓에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청년층 사이에서 부정선거론과 혐종 시위에 공감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청년들의 사회적·정치적 태도는 확정적이라기보다 유동적이라는 점이 더 두드러진다.

극우가 기존 시스템의 위기를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좌파가 오히려 시스템 방어(개헌 요구 등)에 급급한 것은 자승자박이 될 뿐이다. 좌파는 극우 재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대중의 구체적인 불만과 요구에 기반한 대중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은 극우 대응에서 커다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극우 재기에 맞서 조합원 행동을 조직하기는커녕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선관위 사태 이후 발표한 성명은 초기에 선관위 규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극우에 대한 경고·규탄은 한 마디도 없었다.

그러나 선관위 사태로 정치적 격랑이 이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원들 다수가 비정치적일 수는 없다. 좌파는 노동조합 기구들의 비(非)정치성에 결코 적응해서는 안 된다. 극우의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며 극우 반대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확전 위험을 키우고 있다

유럽을 덮친 이 폭염에 앞으로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의 변경에서는 두 주요 전쟁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인 미국-이란 전쟁에 유럽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그 전쟁의 경제적 파장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하나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뒷배 역할을 넘겨받았다. 러시아를 상대하는 일을 유럽 제국주의에 맡긴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할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러시아군은 엄청난 인명 손실을 내면서도 제공권과 병력과 물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디지만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세가 변했다.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기술 우위 덕분이다. 이란도 같은 기술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저지하고 반격에 나선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1인칭 시점(FPV) 자폭 드론을 양산해 왔다. 이 드론은 매우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고, 광섬유 케이블을 쓰면 전파 교란으로 무력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병력 부족을 만회하고 러시아군의 전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됐다. 장거리 드론은 러시아 영토 수백 킬로미터 안쪽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확전 시도 위험을 높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영·프·독·폴 정상

까지 타격하는 ‘중심 타격’을 가능케 했다. 정유소를 불사르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기념일(5월 9일) 열병식 규모를 축소시키고, 러시아가 2014년에 장악한 요충지인 크림 반도를 일시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다. 6월 28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폭격 때문에 연료가 “일정 정도 부족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공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생산을 위해 9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했다. 일부 군수 생산은 독일·영국·덴마크 등 더 서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갖고있는 정밀 타격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목적도 있다. 영국 해군은 재래식 구축함 대신, 드론 운용이 가능한 ‘공용 전투함’을 적어도 여섯 척 주문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공으로 유럽 각국 지배자들은 전보다 들떠 있고, 전쟁 담론을 부추기며 군비 지출 증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전문가 매슈 블랙번은 이렇게 지적한다. “핵강국의 전략 자산과 지도부를 타격하는 것은 냉전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다.”

레닌은 프로이센의 위대한 군사 사상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를 즐겨 인

용했다. 클라우제비츠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들, 지역 강국들 간의 경제적·지정학적 쟁투가 갈수록 대세가 되고 있는 지금,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 동안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심중팔구 전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허풍과 달리, 이란 정권 교체 시도는 대가가 너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푸틴의 셈법은 다르다. 푸틴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어서 물러서기가 어렵다. 러시아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활공 폭탄(항공기에서 투하돼 먼 거리를 활공하는 폭탄) 역재를 우크라이나의 전선들과 도시들에 투하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 드론 역량을 기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랙번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삼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 타격을 자제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를 깊이 타격해 러시아에 망신을 줄 기회만 얻고 있다고 러시아 지도부가 판단하게 되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셈법은 바뀔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을 타격하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중심 타격의 비대칭성을 교정하고 억제력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된 새 역량의 진정한 원천, 즉 유럽의 물류 허브와 제조업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세계에서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강대국과 갈수록 확대되는 전쟁을 벌여야 할지 모른다. 그렇게 됐을 때 유럽 국가들이 냉전 시대 때처럼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핵전쟁 위기로 우리를 끌고갈 수 있는 전쟁을 왜 부추기는 것인가.

출처 Alex Callinicos, 'Europe's backing risks widening war' (2026. 6. 29) / 번역 김중환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핵전쟁 위기로 우리를
끌고갈 수 있는 전쟁을
왜 부추기는 것인가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6월 26일 오후 7시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서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모인 세 번째 집회였다. 이주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려 왔다. 원하청 정주노동자들은 공장 내에서 무료로 식사하지만,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매달 식비로 20만~50만 원가량을 공제당했다. 송출비로 수천만 원 쓰며 어렵게 한국에 왔지만 시작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 고국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한국에 와서 나쁘게 변경된 것이다.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특히 열악했다. 하청업체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도 받는 휴가비, 명절비, 연말 성과급을 1원도 받지 못했다. 올해 초에는 직고용 이주노동자들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용자 측



연대 확대 6월 27일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최근 사용자 측이 제시한 새 계약서에는 기본급 20만 원 삭감, 인사평가에 따른 기본급·성과급 차등 인상, 저평가자 계약 종료라는 개악안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지난해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됐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용자 측이 재계약 거부 등으로 협박했고, 기본급을 7만 원 덜 삭감하겠다고 회유도 했다. 그럼에도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1차 결의대회

에 200여 명, 2차 결의대회에는 250여 명이 모였다.

3차인 26일 투쟁문화제에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합류해 규모가 더 커졌다. 단시간에 현대중공업 정주노동자 82명이 이주노동자 투쟁 지지 연서명에 동참해 연대의사를 밝혔고, 연대 단체도 늘어났다.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투쟁에 참가하기 시작한 점은 불만이 광범하다는 것을 뜻한다.

당장은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안정도 매우 중요한 요구다.

사용자 측은 새 계약서 서명을 압박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귀국해야 된다고 협박했다. HD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에서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계약 만료 후 다른 조선소로 이직할 수 있다고 지난해 언론이 폭로한 것을 보더라도, 해고 위협은 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투쟁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정주노동자들의 연대가 확대되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처우를 개선한다면 정주노동자들의 2026년 단체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연대가 확대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다.

나를 포함해 일부 활동가들은 공장 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026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홍보전을 계획하고 있다. 또 7월 5일 오후 2시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이주노동자 투쟁 지지 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현대중공업 정주노동자들도 적극 참가하자.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억눌려 온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울산 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새 계약서 철회, 식비·잔업·성과급 차별 철폐,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 해당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이 유지되어야 유지·갱신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고용허가제(E-9)에 비해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직종으로만 이직할 수 있어 이직이 더 까다롭다.

2022년 정부는 조선업의 E-7-3 비자 쿼터를 확대했다. 처음에는 주로 사내하청 업체들이 해당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중공업도 직접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직고용 이주

노동자들과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했다. 심지어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그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는 임금이나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2024년 10월 정부는 조선업 신규 E-7-3 이주노동자의 고용 첫 3년간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췄다. 2025년 3월 말부터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이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당시 재계약 거부는 식비 공제에 불만을 제기한 이주노동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사용자 측은 식비 명목으로 매달 50여만 원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제액을 절반가량 줄이면서도, 평소 노동조합이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접촉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새 계약서에서 인

사평가를 강화해 최하 등급을 받는 이주노동자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직고용 이주노동자 수를 줄여 왔다. 2024년 하반기에 1,000명이 넘었던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는 올해 4월 630여 명으로 줄었다.(이주인권시민단체 6월 23일 기자회견 자료)

재계약

이런 와중에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정책의 하나인 '광역형 비자'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은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하청업체의 이주노동자 채용 규모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

다.)((한국경제) 2월 19일 자 보도) 사용자 측이 인사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의 지시는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반대 요구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노동조합과 좌파 일각에서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를 반대해 온 것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투쟁에 나선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정책의 부당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넓혀 직고용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재계약을 보장해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

임준형

이재명 정부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본다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와 탄핵 위기 속에서,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양호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 개선과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국정 행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한 단어로 '정상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회복으로만 좁게 인식한 탓에, 실제로는 기성 질서에 순응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공식 정치 영역에서조차 '정상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6·3 지방선거는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첫 중간평가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확보하며 형식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패해 사상 첫 5선 시장 탄생을 허용했고,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 민주당은 4석을 잃었다. 부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이 당선되며 우파 진영의 차기 주자로 부활했다. 정부가 공들인 '중도 보수(이하 우파) 외연 확장'이 결과적으로는 고사 위기에 몰렸던 국힘을 희생시킨 꼴이 됐다.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월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57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선이 무너졌다. 반면 지방선거 결과 공표 직후 국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29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이후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박빙을 이룰 정도로 급등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은 내란 청산에 근거를 둔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24명을 기소하며, 이들이 2024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한계도 명확했다. 군과 검찰, 사법부, 대기업, 극우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카르텔을 뿌리 뽑지 못한 채, 대중적 공분을 산 극소수 주범을 처벌하는 선에 머물렀다. 조희대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명분으로 내란 청산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국가기구 곳곳에 포진한 쿠데타 동조자들은 발본색원 되기는커녕, 개인적 불법 여부만 따지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미온적인 '내란 청산'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이러한 미온적 정화는 이재명의 '중도 우파 확장' 노선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 노선은 극우를 고립시키기 위한 패배 위기에 몰린 국힘을 되살렸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패인을 '확장 부족'에서 찾으려 테크노크라트이자 네이버 대표 출신 수백억대 자산가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힘 장동혁은 재선거론을 주도하며 숨통을 틔웠고, 원조 친윤 정점식을 새 원내대표로 맞이하며 한숨을 돌렸다. 국힘 지도부는 재선거 소청까지 결정했다. 물론 재선거는 국힘 당론이 아닐뿐더러 오세훈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를 세력 결집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정부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까닭은
그 줄이 자본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줄을 끊어낼
주체는 노동자다



이재명 정부 개혁의 가장 큰 한계는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다

선관위 부실과 극우의 준동

6월 3일 지방선거는 전국 140곳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발송됐고 26곳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혼란을 초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남은 용지를 줄이겠다며 인쇄 하한선을 낮춘 행정편의주의가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불렀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 발표됐고, 올림픽공원 연좌 집회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거세다.

물론 이번 사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이다. 둘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고의성과 조직적 공모 여부이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여당에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할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중복 투표나 용지 바꿔치기 같은 부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투표권 침해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노태우 선관위원장의 사퇴와 국가배상 청구 등 책임 추궁은 가능하나, 이를 조직적 선거 조작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 체제의 신뢰도 저하와 대중의 불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실과 부정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극우 세력은 음모론을 내세워 부실 문제를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바꿔치기한다. 잠실 올림픽공원 연좌 농성은 그 운동의 초점이 됐다. 집회는 걸로 참가자들의 자발성에 기대는 듯하나, 실제로는 극우 유튜버와 조직들이 구호와 행동을 통제한다. 이들은 '재선거' 요구를 앞세워 아직 조직되지 않은 청년층과 시민을 극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음모론은 선관위 비판에서 출발해 이재

명 정부와 언론, '간첩' 담론으로까지 확장된다. 여기에 혐중 정서와 좌파 적대, 이민자 혐오가 결합된다. 교복 입은 청소년부터 대학생, 교회 조직까지 가세해 극우 네트워크가 사회 전반으로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고 있다. 극우는 자신을 극단주의자가 아닌 '권리를 빼앗긴 시민'으로 포장해 대중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 불복은 미국의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운동을 연상케 한다. 혐중·반이민·반좌파의 결합도 독일 대안당(AfD)이나 페기다(PEGIDA) 등 유럽식 극우 정당의 의제 설정과 닮았다.

극우 네트워크

2019년 조국 사태가 '공정' 담론을 통해 극우 성장의 발판이 됐듯, 이번 사태도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는 특정 정부의 책임에 그치지 않고 정치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지배 질서의 위기가 맞물린 결과다. 사회적 혼란이 깊어질수록 극우 세력의 입지는 더욱 넓어진다.

정부가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으나 극우 세력은 공권력만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극우의 실제와 음모론을 폭로하는 한편 일터와 대학, 거리 등 삶의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반극우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훌륭하게도 노동자연대 학생 회원 등 몇몇 좌파 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한 극우의 세력 결집 시도에 맞서 행동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을 '선 넘기'로 규정하고 사용자 쪽에 기울어 개입했다

노동계급 처지에서 바라본 이재명 정부

지난 6월 9~11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50대에서 70퍼센트 안팎으로 높았으나 20대에서는 41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이어 진행된 6월 15~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청년층 이탈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청년층 이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과정에서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긴 탓도 있으나,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 불안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주식시장 활성화에서 찾았다.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구호도 주식시장을 부양해 그 결실을 나누겠다는 발상에 그친다. 자산이 부족한 평범한 청년들에게 주식시장 활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자극해 아무런 호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긴다. 눈에 보이고 상상할 수 있으며 욕망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히 노동계급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인상률은 2.9퍼센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첫째 인상률은 16.4퍼센트였고, '노동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윤석열

정부 첫째조차 5.0퍼센트였다. '노동과 함께하는 공정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의 첫 인상률이 직전 우파 정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삼성전자 파업 미수 사태이다. 이재명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조정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동시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이해되지 않는다",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깎아내렸다. 이어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조를 압박했다. 정부가 5월 17일 긴급조정권 검토를 발표하자 협상은 막판 합의로 내물렸다. 앞서 이재명이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 산업부장관은 기업 편을 들어 내각 안에서 싸우라"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 계급 갈등을 정부가 흡수해 노동자의 직접 행동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도 모순적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원정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분명한 성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고도, 정작 시행 단계에서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슬그머니 추가한 셈이다.

군비, 가장 망설임 없는 지점

계급 문제에서 보이던 좌고우면이 완전히 사라진 영역은 군비 분야다. 2026년 국방예산은 66조 원으로 8.2퍼센트 늘어나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5월 26일 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첫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화했다. 이재명은 이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최근 3주 사이 핵잠수

함과 원자력 협력을 다루는 한미 후속 협의가 서울에서 시작됐다. '자주국방'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기획에 불과하다. 군비에 투입하는 막대한 재정은 공공의료와 돌봄, 주거 예산을 잠식하고 노동자에게는 세금 부담과 전쟁 위협으로 돌아온다.

이재명 정부의 앞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방어선이 무너졌다. 취임 1년 만에 지지율 60퍼센트 선이 붕괴한 반면, 국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반등했다. 고물가와 생활비 위기 등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며칠 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완화 폭이 좁으면 정책 효과가 없고, 넓으면 세수 결손과 실수요자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는다.

현대차 노동쟁의도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뿐 아니라 AI 및 자동화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대차 노동쟁의는 한국 제조업 노동운동의 상징이다. 임금, 성과급, 정년, 노동시간 문제 등 다른 대기업 노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교섭은 늘 '하투(夏鬪)'의 기준점이 된다. 다만 삼성전자 파업 위기처럼 전국적인 정치 위기 수준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 과거 패턴을 보면 현대차 노사는 강경 대처와 부분 파업을 거쳐 막판 타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데다 인력 공백과 현장 혼선 우려가 크다. 초기 혼란이 발생하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재명이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행보는 소위 '검찰 개혁'의 본질이

검찰의 '관리와 활용'에 있음을 보여 준다.(그의 군대나 경찰 같은 다른 강압 기관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고용 유연성 및 정년 연장 논의도 노동계에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너진 지지율 방어선

가장 큰 한계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자본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직전 우파 정부보다 낮게 억제하고 노동자 파업을 '선 넘기'로 규정했다. 부동산 문제를 자산시장 활성화로 해결하려 한 점과 군비를 증강한 지난 1년의 행보는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보여 준다.

이재명의 개혁이 허구라는 주장은 아니다. 노란봉투법 도입, 임금 체불 대책 마련, 법인세 복원 등은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부분적이고 계급적으로 제한적이다.

진정한 개혁 조치는 지지하되 한계와 모순, 기만은 들춰 내야 한다.

극우 세력의 반동에 직면해 정부의 국정 정상화 전략과는 달리 독자적인 반극우 맞불 동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까닭은 그 줄이 자본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줄을 끊어낼 주체는 노동자다. 반정부·반극우·반자본 정치 선동과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사진: 김민준

서울 신규 주택의 상당수를 외부 사람들이 구입할 정도로 투기 수요가 크다

“닥치고” 주택 공급은 부동산 투기만 키운다

강동훈

6월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재명 정부 취임 첫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7퍼센트다. 이 수치는 집값이 크게 오른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초반 1년 집값 상승률보다 높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적인 임금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서울 전세는 6.77퍼센트, 월세는 8.99퍼센트 올랐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보다 훨씬 쉽다”고 큰소리쳤지만,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집 없는 서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주택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와 공급을 늘

려 집값을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6·27,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게 막았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말이다. 이 공급 방안은 개발 폐해에 대한 반감과 갈등, 지역 유지들의 반발, 기존 시설 이전 비용 등으로 역대 정부들도 실패했던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물론 집 없는 서민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사 이재명 정부의 방안대로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류 경제학은 상품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다수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는

‘유효수요’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택 대출이 억제돼 있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없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은 노동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보다 부유층의 투기용 부동산 수요나 충족시켜 줄 공산이 큰 것이다.

실제로 6월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 20만 채 중 절반 이상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신규 주택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판매됐음을 뜻한다.

그동안 주택 수가 꾸준히 늘어 왔지만,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0퍼센트 수준(전국은 60퍼센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주택 공급 확대가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값비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노동계급 다수의 주택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높아져 고통만 커질 뿐이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민의 24만 5,194가구(5.9퍼센트)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 같은 반지하에서 살아간다.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임시숙소 등 포함)에 거주하는 가구도 2010년 39만 1,000가구(144만 3,000명)에서 2020년 119만 3,000가구(277만 9,000명)로 증가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최근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급 확대 정책 경쟁을 벌인 정원오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며 “공공임대주택을 20퍼센트 수준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주장이다. 다만,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막대한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비판이나 촉구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윤 논리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을 고무·성장시키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김종민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낳은 후폭풍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특별 호황으로 유동성이나 거시 매크로는 엄청 좋아지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며 “막대한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경제 전반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 주택 가격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금리가 낮아졌고, 생산에 투자되지 않는 자금이 금융 투기와, 특히 부동산 투기로 몰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 주면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실패를 피하려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

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말이다.

상법 개정 같은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 반도체 초호황을 만나 최근 코스피 지수는 9,000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애초에 자산이 부족해 주식에 투자할 돈이 없었던 평범한 청년들에게 주식시장 활황은 상대적 박탈감만 자극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유층이 주식을 헐어서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집값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주식·채권 매각 대금 3조 7,000억 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고, 그중 상당 부분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평범한 청년들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또다시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

한편, 집값이 급등하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 1주년 회견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서구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담는다고 한다. 세부 안으로 종부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폐지 등이 거론된다.

물론 부자들이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당도 주택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의당도 “지가 초과 상승분의 50퍼센트를 중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집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강화는 충분한 대책이 되기 힘들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연장은 없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요구했을 때 일시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후퇴 조짐도 보인다.

이래저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더 깎아먹을 공산이 크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대폭 강화는 부유층의 반발을 사 중도 보수 확장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고,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세금 인상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공개 토론회 영상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70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현대차 노동자들, 사상 최대 실적에 걸맞은 임금과 고용 보장 요구

현대차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6월 24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 참가 조합원 3만 7,348명 중 3만 4,3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자 대비 92.03퍼센트, 전체 조합원 대비로는 86.65퍼센트 찬성이다.

지난해 '6년 무분규'를 끝내고 16시간 부분 파업에 나섰을 때보다도 찬성률이 높다.

현대차 쟁대위는 6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수위와 시기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 800퍼센트 지급과 함께,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10조 3,600억 원의 30퍼센트인 3조 1,200억 원을 현대차 전체 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투쟁 불씨가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11차례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쟁의 행위 투표가 가결되자 대표 이사가 직접 노조 사무실에 찾아와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현대차 노동자들의 파업 예고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에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기도 한다.

안 그래도 정부가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에 대해 주주 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 여제에 나서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급 요구를 포함한 임금



투쟁 경험이 많고 잘 조직된 현대차노조의 투쟁은 제조업 노동운동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인상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영업이익이 평균 28.7퍼센트씩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의 결과다. 영업이익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창출됐고, 성과급 인상 요구는 노동자들이 만든 가치 중 임금 몫을 더 확대하라는 정당한 요구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킹산직(King産職)'('생산직 중 최고'라는 뜻의 신조어)이라고 불리지만, 최근 몇 년간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현대차 사측이 챙긴 당기 순이익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또, 현대차 노동자들은 이번에 기본급 인상으로 고정급 부분을 대폭 올리길 바라고 있다. 임금 가운데 변동급 비중이 46.9퍼센트나 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 신입 생산직 기본급은 약 164만 원이고, 30년 근속을 했어도 약 250만 원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을 벌충해야 한다. 현대차 노동자의 2025년 연간 실노동시간은 1,91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6시간이나 더 많다.

현대차 5공장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급이 너무 적다 보니, 특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달에 2~3개는 특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에서 기본급이 많이 오르길 바라요. 특히 기본급이 매우 낮은 근속년수가 얼마 안 된 조합원들은 더 그래요.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성과급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고용 불안정

올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뿐 아니라, 고용 안정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머지않은 미래에 생산 현장의 AI·자동화 전환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시도가 클 것으로 보고, 제도적 안전장치(완전 월급제 등)를 마련하려고 한다.

현재 현대차 공장은 곳곳이 공사 중이다. 얼마 전에 EV전기차 공장이 신축됐고, 수소연료전지 공장도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올해 3월에 1공장(코나, 아이오닉 생산)과 4공장 2라인(포터 생산) 재건축을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하면서, 이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모두 허물고 4개월 동안 최고 수준의 자동화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라 노동자들은 단협에 규정된 대로 '유급 휴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수용 불가를 고집했다.

여기에 20만 대 정도의 물량이 미국

공장으로 이관될 것이라는 계획도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기층 분위기는 이미 '쟁발' 분위기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 가결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내려 파업권을 획득한 바로 다음 날 사용자 측이 한 발 물러섰다. 재건축으로 쉬게 되는 노동자들을 신축 전기차 공장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양보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유급 휴업'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AI·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 불안을 막아내려면 기층에서 해당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집단행동으로 싸워 힘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차노조는 투쟁 경험이 많고 잘 조직된 강력한 노조로, 현대차노조의 성과는 다른 완성차 노조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최근 임금 투쟁이 실질임금을 가까스로 방어할 정도였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잠재력을 현실화하면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AI·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얘기가 많지만, 노동자 자신의 단체행동이 없다면 임금과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외친다

“최저임금으로 당신네가 살아 보라!”

6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폭폭 찌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노동자 약 3,000명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가득 채웠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집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앉아서 실질임금이 깎이고 있다며, 현재 1만 320원인 최저임금을 1만 2,000원으로 대폭 올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연단에 오른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생계비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자고 일어나면 월세가 오르고, 내 가족 먹여 살릴 밥상 물가가 오르고, 아플 때 가야 할 병원비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대를 훌쩍 넘기며 폭등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언제나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그 결과,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에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곤두박질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



6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집회

지 않습니다. ... 뼈 빠지게 일하고도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현 지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8만 8,000여 명이 방학에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필자가 만난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각종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지만 기본급만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학교 기능 확대로 업무는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경찬 전국가전통통신서비스노조 코

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업자’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방문점검원은 매주 지역 사무실로 출퇴근합니다. 위치를 실시간 추적당합니다. 복장, 절차, 전부 [회사의] 매뉴얼대로입니다. 고객 이슈 생기면 원아웃 바로 계약해집니다. 이게 사업자인가요? 프리랜서입니까? 이건 노동자입니다.”

“정부에게 말합니다. 코스피 9,000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장을 만든 노동자부터 대접하십시오.”

노경찬 지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부결시킨 것을 규탄했다.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이 부결되도 특수고용노동자 최저보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내가 한번 살아보라, 최저임금 대폭 올려!” “밥한 끼도 못 사 먹는다, 최저임금 즉각 올려!” 등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임준형

▶ 12면에서 이어짐

환멸 키우는 그들만의 리그

민주당 내 정쟁은 그 제한적이고 위선적인 성격 때문에 가뜩이나 불길한 지방선거 결과에 이어 진보적 지지층의 환멸만 키우고 있다.

한국갤럽 6월 4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퍼센트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40퍼센트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렀다.

친문 측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이탈이라며 비판하지만, 조국 같은 ‘아빠 찬스’ 사용자

를 차기 주자로 내세우는 것은 특히 청년층에서 더 큰 환멸만 낳을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와 일자리 부족으로 불만스러운 청년들의 눈으로 보면, ‘내란 청산’을 최고 목표로 밝히고도 윤석열과 한패였던 자들에게까지 공직을 맡기는 등 ‘중도보수 확장’과 ‘도로 문제인’ 둘 다 위선적이고 짜증나는 ‘그들만의 리그’다.

문제는 좌파가 가시적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약성 때문에 민주당 지지 이탈로 오른쪽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 언론조차 수 개월 간 위기에 빠졌다고 묘사한 장동혁은 지금 사퇴는커녕 당내 반발자들을 징계하겠

다며 기세등등하게 복귀했다.

물론 좌파의 취약성이 곧 노동계급의 취약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느 정도 방어해 왔고, 또 지킬 자신감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보여 주듯이 경제 상황을 이용해 일부 성과를 얻은 곳들이 있고, 이를 준거점으로 보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싸운다면 노동계급의 분위기는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다.

좌파가 성과급 등 임금 문제를 놓고 영똥한 설교를 늘어놓기보다 이를 지지하며 연대 구축에 나서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큰 위기에 빠질지 몰라도) 지금처럼 정치 지형 전체가

극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방향 속에서만 좌파가 다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장호중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트럼프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 지방선거 이후 좌파는 개혁 염원 대중의 실망과 환멸을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 드라마평 (참교육)이 간과하는 매우 사회적인 진실들



민주당 내 갈등 친명의 '중도보수 확장' 실망을 파고드는 친문: 둘 다 내로남불

올해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된다.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라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들어선다.

그런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한 조각을 남길지 말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 또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다.

차기 당권 주자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던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정부안은 내지 않겠다고 밝히며 일시 봉합된 듯하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권 축소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 '개혁'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두 억압 기구인 검찰과 경찰 사이의 업무 분담에 관한 것일 뿐이다. 즉, 그것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진정한 개혁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노동계급 등 서민층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는 국가 기관들이다. 정부 여당과 친정부 언론은 검찰의 '조작 기소', '먼지떨기', '몽개기'를 비판하지만, 정작 같은 일들이 경찰에서도 벌어질 뿐 아니라 계급 편향성으로 보자면 검찰 못지 않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예컨대 윤석열의 '내란'에서도 경찰은 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서 주요 구실을 했다. 불과 얼마 전에는 화물연대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다가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반면 경찰은 지금 울림공원에서 벌어지는 극우 시위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파 정권 하에서 형성된 검찰 네트워크가 민주당 인사들을 괴롭히고 민주당 정권에 저항한다는 사실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작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게 권한을 더 준다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정부 여당 자신이 애초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 자체에 모순이 있다.

범죄 수사와 기소는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과정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군가 전체 수사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 억압 기능과 그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을 빼앗겨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파위가 질적으로 약화될 리도 없다.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진정한 개혁은, 경찰과 검찰 같은 국가 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저항을 억압하고 지배계급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고려하면 단지 법률 개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알맹이 없는 선명성 경쟁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이토록 무의미한 의제에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당 내 양대 세력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돼 버렸기 때문이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준다. 그 이듬해가 대선이므로 사실 차기 대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다.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지 이외에도 청와대와 내각에 누구를 기용할지, 차기 대선을 노리는 조국을 계속 민주당 밖에 뒤야 하는지 등도 쟁점이다.

친문 유시민이 '증축 하렷더니 재건축 한다'며 이재명을 대놓고 성토했던 것은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집주인' 허락 받고 하라는 뜻이다. 여전히 당내 세력은 자신들이 우위라는 말이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당권을 빼앗긴 친명 강경파는 친문을 온갖 멸칭으로 부르며 문재인을 배신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측이 과거 정권을 잡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신해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게 됐던 것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의 보수적 인물을 거둬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친문이 (보완수사권 부여를 통한) 청와대의 검찰 포섭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친문이 지지하는 정청래는 마침내 SNS에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이재명의 청와대는 반년 넘게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해 왔지만, 당대표 선거에 나서려는 김민석 총리는 결국 독자적인 정부 법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고수가 (선명성 부족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아예 삭제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내놓고 '제한적 처리'를 외치며 이 대립의 한 축이 되려 한다.

▶ 11면으로 이어짐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음모, 음모론,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일시 7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전문통역사의영어동시통역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참가비 6,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부산/울산

젠더는 무엇이고, 왜 새로운 전장이 됐나?

일시 7월 19일(일)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 스테디룸 3층 a-sm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성지현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